

[13 차시] 여성정치참여의 현실

[학습내용-1] 세계여성의 정치참여

1) 여성참여의 환경

-이미 여성의 정치참여의 이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성의 참여는 유권자로서의 참여, 운동주체로서의 참여 등이 있으나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정치참여의 초점은 정치적 대표성으로 모아졌다.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강조되었다. 1995년의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정치적 결정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한 참여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의 전제이며 여성의 이해와 관심을 고려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선언하고 이를 위한 전략과 행동목표를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2) 참여 현황 및 여성권한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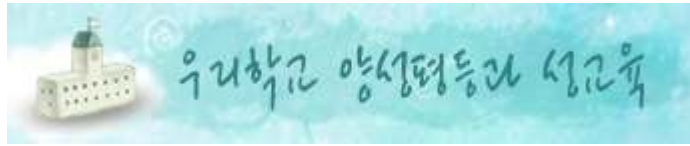
-유엔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적어도 30%까지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4만여 명의 의원 중 남성이 86%를 차지하고 여성은 5천여 명으로 14%에 불과하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세계적인 현황과 비교는 유엔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여성권한 지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유엔은 의회에서의 비율, 행정관리직, 전문직비율, 남녀임금비교 등을 통해 여성의 권한을 평가하고 있다.

-여성의 참여가 활발한 국가들로는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북구국가들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비해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여성의원 비율이 저조한 편이다.

보충설명) 미국은 여성의원 비율은 낮으나 행정관리직 비율, 전문기술직비율, 남녀소득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여성권한척도 순위가 높다.

북구나 독일의 참여도가 높은 이유는 사회적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사민주의적 경향이 짙고 이미 70년대, 80년대부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할당제등을 도입하여 여성의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배려하고 있었다. 또 프랑스의 경우는 2000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남녀동수추천제를 도입하여 모든 선출직의 후보에 여성을 50%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13 차시] 여성정치참여의 현실

[학습내용-2]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1) 개요

-한국여성의 정치참여는 다른 영역에 비해, 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국가비교척도인 여성권한척도로 볼 때도 한국은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는 1948년 이후 실시되는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여성위원을 배출하는가와 1991년부터 실시된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의원 비율을 볼 수 있다.

2) 국회의원 현황

-한국의 여성국회의원 수는 1996년 선거를 치른 15대까지 10여명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수가 300명에 가까운 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숫자는 평균 3%정도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보충설명)현재 국회법상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미만에 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5대, 16대는 279명, 17대, 18대는 299명이 국회의원 정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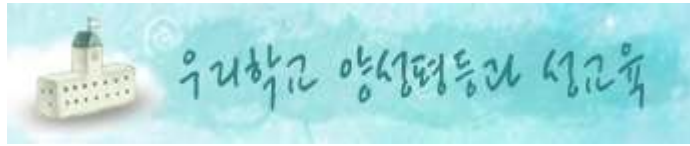
-아래 표를 보면 16대부터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할당제에 힘입은 바 크다. 2000년부터 정당법 개정에 의해 비례대표직에 여성위원을 30%할당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04년 17대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직에 50% 교호순번제로 할당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17대에는 비례대표직의 비율이 20%(299석중 56석)로 증가한 덕분이기도 하다.

- 국회의원은 선출직과 비례대표직으로 구분되는데 여성들은 주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는 선출직이 아닌 정당의 추천을 받는 비례대표직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비례대표직 여성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29명(39명중), 18대에서 27명(41명중)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3)지방의원 현황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199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1991년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은 1995년부터 선출하기 시작했다. 역대 지방여성의원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여성비율은 2002년까지 평균 3%에 머물렀다. 2006년 선거에서 여성비율이 증가한 것은 기초의회에 비례대표직(10%)이 도입되고 50%여성할당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13 차시] 여성정치참여의 현실

[학습내용-3] 원인과 대책

1) 원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부진의 첫 번째 원인은 우선 공급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즉 정치 영역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여성들이 적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유교적 인식에서 정치는 국가중대사를 다루는 일이고 따라서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남아있는 인식이다. 따라서 여성들도 정치적 일을 하기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공급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상황적 제약으로 여성참여가 힘들다는 것이다. 양육과 가사 등 여성에게 부담된 고유의 업무 때문에 여성들이 정치영역에 적합한 능력을 쌓을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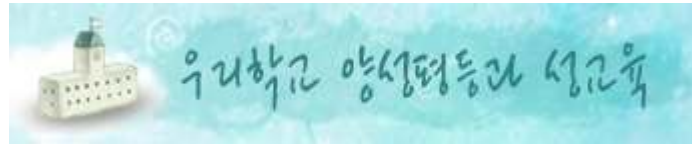
보충설명) 정치에서 여성의 참여가 부족하고 따라서 여성이 좀 더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때 기성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쓸만한 여성이 없다'는 말이다. 즉 남성의 경우는 당 내에서 인재를 키우지만 여성의 경우는 만족할 만한 조건을 가진 여성이 있을 때 그 충원을 생각해 보겠다는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수요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정치참여에 확고한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다.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여성이나 신인에게 불리하며, 조직으로 움직이는 당내 경선 등도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할당제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2) 활성화 방안

-첫 번째는 의식의 변화이다. 여성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정치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일반 여성들을 위한 교육, 여성후보와 정치참모를 길러내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여성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정치적 소양과 기획 등 역량 있는 정치후보자를 길러내야 한다.

보충설명) 현재 각 당 별로 선관위로부터 지급받는 국고보조금 중 10%를 당내의 여성들의 교육과 여성후보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여성발전기금법을 마련하여 여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13 차시] 여성정치참여의 현실

-두 번째는 제도적 개선이다. 우선 개선되어야 할 점은 현재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적절하게 병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한 지역구에서 가장 득표가 많은 한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소수 유권자들의 의지가 묵살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으나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0%내외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작다. 따라서 비례대표직의 비율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충설명) 현재 한국의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직을 병행하는 것으로 비율은 18대의 경우 299석 중 비례대표직이 54석을 차지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신인, 전문가들의 진출을 위해 선출직과 비례대표직의 비율을 1:1, 최소한 2:1로 권유하고 있다. 북구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은 선출직과 비례직의 비율이 1:1이다.

-제도적 개선의 또 하나의 방법은 할당제등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의 실행이다. 할당제는 여성의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권유되는 방안으로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구성원의 일정비율을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차별로 인한 영향이 없어질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용어설명)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조치란 기존의 차별 때문에 발생한 영향을 없애고 미래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진출 비율이 낮은 분야에 잠정적으로 일정 비율의 여성을 강제로 투입하는 우선 대우, 보충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정의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는 여성이 자립적으로 평등 지분을 획득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유럽의 경우는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자국의 사정에 적합하게 정당 간부직, 지방 의회의원, 국회의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채우는 정치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